

한겨레

“대북 전단으로 북 주민 위협해질수도” 탈북민들도 살포 강행에 반대 목소리

북한이탈주민들 의견 들어보니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가 6·25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알린 가운데 탈북민들 안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북한 주민 인권 향상'에 전단 살포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에 남은 가족들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겨레>는 12일 대북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북한에서 뼈라(대북 전단)를 줘게 되면 바로 한국의 파출소와 같은 분주소에 갖다 바치거나 찢어서 땅에 묻어야 한다. 잃어버리다가 걸리면 바로 처벌받는다." 2004년까지 평양에서 살다 탈북한 7씨는 대북 전단 때문에 북한 주민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들 손엔 가닿지 못하거나 우연히 발견해 소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2004년 탈북한 40대 남성 L씨는 "주민들은 뼈라 자체가 떨어지는 걸 잘 모른다. 시내에는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민 C씨도 "북한에선 남한이 전단과 함께 보내는 쌀을 만지면 손이 썩고 병에 걸린다고 선전한다. 백번 뿌려 봐야 소용없다. 남북관계가 좋아져 남한 정부가 정식으로 쌀을 보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들이 케트병

“줍거나 입다 걸리면 처벌받아”
“탈북 가족 심한 박해당할 우려”
남북관계·탈북민 인식 악화로 걱정
“구시대적 행위, 정부가 제재할”

경기도, 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조치

에 쌀을 담아 전단과 함께 방류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탈북민들로서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탈북민들을 '배신자' '쓰레기' 등으로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이런 북한 지도부의 분노가 어디로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2005년 탈북한 R씨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 친척에게 전화하다 말각돼 몇달째 북한 국가보위성에 붙들려 있는 조카가 걱정된다"고 했다. 탈북민 홍아부(45)씨도 "평양에 오빠가 남아 있다. 3개월 전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해 죽겠다"고 말했다. 홍씨는 바삼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부모와 두 동생이 모두 함께 남아있다'고 밝힌 사실을 들면서 "북한

에 남은 가족이 없어 마음 편히 뼈라를 뿌리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탈북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을 적대 국면으로 몰아넣은 점도 염려했다. 박영남(49)씨는 "앞으로 대화 채널이 열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 사람들(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왜 굳이 북한을 자극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국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탈북민 D(52)씨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무리하는 사람 때문에 한국에서 힘들게 사는 탈북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 괜히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하게 된다. 주위 탈북민 70%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아부씨는 "남한보다 낙후된 북한 현실을 모르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남북관계만 악화시키는 구시대적인 뼈라를 언제까지 날리겠다는 거냐"며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앞서 11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고발하고 법원 취소에 착수한 데 이어 경기도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김포·파주·연천 등 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에 떠는데... 대북전단 날리겠다는 탈북단체

25일께 예정...21일엔 쌀 보낼 계획
경찰 "접경지역 경비 강화" 비상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처벌 방침에도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엔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4면

지난달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께 '6·25 전쟁의 실상', '김정은의 10대 죄악'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4일 <한겨레>와 한 봉화에서 "바람 방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25일에 맞춰서 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상 관측 보고를 보고 25일을 전후

해 북한에 꼭 보낼 계획"이라며 "경찰이 현재 접경지역을 밤새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선을 띄우지 못하게 하면 드론으로라도 꼭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박대표의 동생인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탈북민 단체 '큰샘'도 21일께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으로 풍선을 띄워 쌀 500kg을 보낼 계획이다.

지난 11일 통일부가 이들 단체를 고발한 뒤 법인 취소에 착수했고, 경기도도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단체들의 전단 살포 계획에는 반동이 없는 상태다. 경찰청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가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는 데 예를 먹고 있다.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에 경비 인원을 늘려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강재구 기자 ph@hani.co.kr**

경기도 “접경지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댄 체포”… 탈북민단체 “그래도 강행”

도, ‘사회재난’으로 간주 강경책
권태 없는 대응에 논란 소지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경기도도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단 살포지를 한층 넓혀서 제포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영리한 탈북민단체는 ‘살포 강행’으로 맞설 태세에서 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경기도 행정자치부는 12일까지 행정청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성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4년 대북전단 살포 뒤 북한이 연천군에 고사총을 발사한 사태를 들어 전단 살포 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했다. 대응책으로 접경지역 내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등 대북전단 살포 전 근거리 행위 사전 차단 등을 제시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위반자를 행정벌로 제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같은 대응 방안은 권태가 없었다는 관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

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 농경지안 등 출입금지 등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사회재난’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사전신고되는 대북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고위위법고발

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중 살포로 전단지 가 지상에 떨어지면 이를 분쇄기 등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 2항에 의해 복구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처벌당고물범 등으로 단속 및 처벌한 사례는 없다.

이날 이 부지서도 “위험구역 지정은 천재가 없으나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행정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책과 원활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경기도의 대북전단 위원회는 12일

경안 브레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막았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안 전단과 불행은 책으로 보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거세게 반발, 예정대로 오는 25일 전후에 대북전단을 대량 살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기자 byon@hnews.com



일진각 향하는 경찰 12일 경기 파주시 일진각으로 경찰 버스가 집결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통행을 막고 위반 시 현행법으로 제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념일 결국 '반쪽'... 南 독자 행사

SNS 공유 등 비대면 위주 진행

백소용 기자

코로나19와 남북 경색 상황에서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이 예초에 예상했던 남북공동행사 대신 남한만의 독자적인 행사로 대폭 축소돼 열린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15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20주년 기념식은 현재 남북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축소돼 진행된다.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 김대중평화센터는 공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6·15 20주년 기념식 및 시민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14일에는 시민들이 경기 파주 집결지역 일대를 걷는

'평화산책' 프로그램도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20주년을 맞아 추진할 계획이었던 남북공동행사는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가 20주년인 만큼 남북이 같이 기념했으면 하는 희망은 언제나 있었고, 가능성을 생각해왔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데다 정세 문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6·15 공동선언 이듬해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기념행사는 민간단체

를 주축으로 금강산, 인천, 평양, 광주 등지에서 매년 열렸고 2009년부터 따로 열렸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10여년만의 공동행사가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밖의 6·15 공동선언 관련 행사는 남한에서 비대면 위주로 진행됐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평화를 주제로 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평화챌린지', 13일 KBS '달무리의 명곡' 특별 방송 등 방송 행사가 대표적이다.

서울신문

“北 실상 알릴 유일 수단”

25일 한국전쟁 70주년 맞아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 강행

박정오·이민복 탈북민 관련단체 대표

대북 전단(베라)을 놓고 북측의 대남 비난이 계속되자 통일부는 지난 11일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를 수사에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경기도는 집결지역 베라 살포자들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일부 탈북민 단체는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살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은 경찰 조사를 앞둔 박정오(51) 큰샘 대표와 풍선에 전단을 매다는 기술을 저음 개발한 이민복(63) 대북풍선단장을 지난 11일 서울과 경기 포천에서 직접 만났다. 박 대표의 형으로, 또 다른 수사 대상인 박상학(52) 자유북원은 동연합 대표는 현재 연문 접촉을 끊은 상태다.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정오 대표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고, 형은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린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독재자’ 감시 카메라에 속고 있다.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다”며 “우리가 탈북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점을 적어 보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년 남한에 온 뒤 20년 가까이 대북 전단

을 풍선에 매달아 보낸 이 단장은 남에서 온 전단을 본 뒤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전단을 통해 6·25가 북침이 아닌 남침이라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도 한국전쟁의 진실과 남한의 생활상 전반에 대한 글을 써서 보낸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1년에 1000~1500개의 대형 풍선을 띄운다고 했다. 1000개만 보내도 연간 살포되는 전단이 3억장이다. 그는 “아무리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북의 독재 체제는 바뀔 수 없다”면서 “전단에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손전화(휴대전화) 연락처를 적는데, 가끔 ‘잘 봤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이 집결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박 대표는 “남한 주민 중에도 우리가 ‘좋은 일한다’며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대남 비난이 격해지자 정부가 대북 전단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단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현범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 전단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수령인을 특정하지 않은 전단을 불법 반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손자민 기자 sim@seoul.co.kr

대북 전단 살포 찬반의견 팽팽



지난 11일 경기 포천시 한 창고에 대북 전단(베라)이 쌓여 있는 모습. 가로 8cm, 세로 10.5cm 정도로 성인 손바닥만 한 크기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전단으로 실상 접한 후 탈북 결심”
주민 생각 안 바뀌면 독재 안 변해

“北 도발 꼬투리만 잡혀”

표현의 자유 아니다... 남북 관계 악화 땐 접경지 주민만 피해

이길연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 의장

“북한이 도발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접경지역 주민들입니다. 배라(대북 전단)를 날리는 단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이길연(63)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린다는)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북한이 감경하게 대응할 꼬투리를 준다는 점을 지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만큼 전단을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용납하는 대신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대북 전단이야말로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10월 탈북민 단체들이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음향에 북한군이 고사포(14.5mm 기관총)를 10여발 발사했고, 그 탄두가 연천에 떨어져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야 했다. 최병종(66) 김포시농민회장은 “북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전단을 뿌린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싫으면 정치행위로 합의해야지, 약 올리듯 배라를 부

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탈북민 사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 보위사령부 지파 간첩사건 피해자인 홍강철(47)씨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과 그의 동생 박영학은 바정으로 개명해 큰섬 단체를 만들어 배라 장사를 해먹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에서는 배라 때문에 탈북자를 성토하는 대화가 열렸는데, 그 집회를 본 가족들은 큰 수치감에 젖어 있을 것”이라면서 “저의 말과 친척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걸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과 파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뜻을 밝혔다. 고양시민회, 겨레하나 파주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1일 낸 성명서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가 곧 삶이다. 삶을 뿌리째 흔드는 일체의 적대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4년과 2018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린 대북 전단이 북으로 가지 않고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경계에서 발견됐으며 “대북 전단이 아닌 대남 전단”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북 풍선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매달아 북한에 도달하는지 입증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응한 단체는 없었다. 김정화기자 cmh@seoul.co.kr

“대북 전단이야말로 실존하는 위협 대부분 남한에 떨어져... 실익 의문”

道, 대북전단 살포 차단 초강수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
위험지역 지정-출입 원천봉쇄
이재강 부지사 "대북전단 살포
군사 충돌 유발 위기조장 행위"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도내 접경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초강
수를 뒀다.

또 관련 법령을 근거로 도가 할 수 있
는 최대한의 단속과 수사, 고발에 나선
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
용을 담은 '달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
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

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
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
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
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
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
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
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
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
치 등 3가지다.

이 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푼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
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혐의한 비방
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
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대북전단 살
포로 남북간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 안
전이 위협을 받는 등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수안-영호원기자

법률칼럼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일까?



김광민
부인형소년법률센터장 변호사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형성된 위임권력이다. 위임권력은 시민의 그것에 군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근래 들어 헌법 제37조 제2항이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대북전단살포'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군사적 행동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 할 경우 헌법범으로 제포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주위 측

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이 역시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했듯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여타 다른 권리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유지·발전된다. 좁게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밖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까지, 공동체의 정책적 결정 사항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작동된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때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어야 정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고 그때야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되어야 한다.

대북전단살포 역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단지, 소책자, 엽서카드 등의 매체를 통해 북한인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현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는 분명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될 뿐 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이의 표현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억압하는 경우와 공동체에 즉각적인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대북전단은 북한 정권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3대째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제4조) 전쟁을 반대한다(제6조). 그렇기에 당연히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로운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평화로운 방식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한다. 북한을 대화 상대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이들의 방식대로 한다면 북한은 대화의 상대편이 아닌 대결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북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날려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한 내부에서도 정치적 목소리를 높

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극한의 혐오 표현은 남한 공동체 내에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이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다른 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 당연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에 즉각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공존하기 어렵다. 그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한 보여 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된다면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하곤 했다. 이처럼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에 즉각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과 공동체의 이익을 비교衡量 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위해를 가한다면 당연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김포·고양·파주·연천 '위험구역' 지정... 살포자 출입 제한

1. 대북전단 대응 방안 발표

출입제한 특별경계 수사·엄격조치
미신고 전단, 불법 광고활동 진구
7개 시군과 합동점검 협회 확대
도의회, 정부에 권립법 제정 촉구

경기도가 일종의 발수를 내임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를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응 대북전단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제히 불법전단을 살포하는 7개 시군과 합동점검 협회 확대 도의회, 정부에 권립법 제정 촉구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 해당 시·군·구(연천·파주·고양·김포·고양·파주·연천)에 대해 불법전단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이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구(연천·파주·고양·김포)에 대해 불법전단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이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구(연천·파주·고양·김포)에 대해 불법전단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을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사와 엄격조치(제4조)이다. 또 시·군·구(연천·파주·고양·김포·고양·파주·연천)에 대해 불법전단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이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구(연천·파주·고양·김포)에 대해 불법전단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합동점검반'을 편성 할 계획으로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또 시·군·구(연천·파주·고양·김포·고양·파주·연천)에 대해 불법전단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이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구(연천·파주·고양·김포)에 대해 불법전단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엄격조치(제4조)이다. 이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구(연천·파주·고양·김포)에 대해 불법전단 살포자를 엄격조치(제4조)이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원천 봉쇄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기도가 북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광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인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바람에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북한은 이날 탈북인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이 날려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평화 위협행위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위험천만한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한다. 이에 편승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제344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금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 김영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4일 담화문에서 '연속적이고 철저한 보복' 즉 군사행동도 서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연일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북전단 금지 입법인 '전단 살포 중단 법률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도 이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사회재난에 준하는 판단보다 해당 단체를 설득하고 협조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우선해 이를 발표한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나, 주민의 안전이 먼저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몫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남남갈등이 또다시 불거지지 않기를 바람에서다.

OBSNEWS

정부, 남북관계 경색에 6·15선언 행사 일부 축소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치르게 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식순이 아직 유동적이지만 일부 일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1시간 가량 기념만찬을 하고 6·15 공동선언문 낭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과 이산가족 상봉 영상 시청 등으로 구성된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전면 이행 촉구' 경기 지역 기자회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분부는 오늘 낮 1시반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제화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21대 국회는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를 비준하고 법제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9.19 군사분야합의 파기,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있는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15선언 20주년 정부 기념식 일부 축소...북한은 반응 없이 도발 위협 계속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정부 기념식 행사를 일부 축소해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김대중 평화센터와 함께 오늘(15일) 오후 5시 반부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 만찬과 기념식을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6.15 정상회담 관계자들은 기념식 시작 전 비공개 만찬을 갖는다.

이후 6·15 공동선언문 낭독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및 이산가족 상봉 영상, 공연 등으로 구성된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준비해 왔지만, 코로나 19 상황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남측 단독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 인사들이 대남 비난 담화를 계속하자 이마저도 축소 및 변경해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에 허용됐던 통일부 기자단의 기념식 현장 취재도 취소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15일) 6.15 공동선언 관련 언급 없이 "감히 하늘에 대고 싹대질한 원수들을 겨누는 우리의 서리발(서릿발) 치는 모퉁 행동은 끝장을 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군사 도발 위협을 이어갔다. / 박경준 기자

'6·15 20주년' 언급 없는 北 "서릿발 치는 보복" 위협



[앵커]

역사적인 남북관계의 문을 연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흘렀습니다만 최근 남북관계는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전망합니다.

북한은 오늘도 서릿발치는 보복에 나서겠다고 미안 공세를 이어갔고, 정부는 남북 간 합의는 남북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역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북한이 오늘도 강도 높은 비난전을 펼쳤다고요?

[기자]

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한 매체들은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릿발치는 보복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세론 매장에서 '굴항을 불 태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썼고

우리 정부의 은폐된 적대시 정책과 무능한 처사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고착상태가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오욕은 일인 정세에 대한 오욕이리면서 이미 친명한 대국 남북공동선언사무소가 협제도 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그 다음 대적 행동의 발생경은 군대에 위원을 갖기리면서, 군이 인민의 영한을 끌어올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군사적 행동도 암시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지난 13일 나온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같은 맥락인데요.

김여정 제1부장은 마지막에 불모르는 남북공동선언사무소가 협제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며,

다음의 대적 행동의 발생경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 영민의 분노를 다스려야 적혁을 무인 가를 단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일단 조치해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세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대한 낮은 수위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골자인 남북공동선언사무소를 철거하겠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외주사하며 방문 이어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 예상기 대변인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폭력이 공언한 대로 남북공동선언사무소를 철거한다면 폭력에서 방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정부도 상황을 지켜보며 반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과 관련하여는 지난 20년간 여러 난관에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6·15 선언의 정신 위에서 진전을 거듭해왔다면

정부는 6·15 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현안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15 20주년 기념식은 오늘 저녁 모두산 통일전당에서 김민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순 서영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부 단독으로 치러지며,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행사는 계획보다 축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거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가 악화한 건 우리 정부가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과 4대 남북합의의 국외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